

본 자료는 법무부에서 외주 사업을 통해 번역한 문서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인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이란 인권 보고서

개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의 인권 상황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올해 여러 분야에서 더욱 악화됐다. 정부는 수백 명의 수감자를 처형했으며, 여기에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이들이 다수 포함됐다. 여성 복장 규정 단속 과정에서 폭력을 수반한 새로운 사례들도 발생했다. 올해 여성, 생명, 자유 운동 관련 시위로 구금된 인원을 포함해 일부 정치범이 석방됐으나, 다른 시위 참가자들은 체포되어 징역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거나, 고문 및 처형을 당하기도 했다. 올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신빙성 있는 보고에 따르면, 주요 인권 문제로는 자의적·불법적 살인, 실종,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 자의적 체포 및 구금, 해외 체류자를 겨냥한 초국가적 탄압, 분쟁 상황에서의 심각한 학대 등이 보고됐다. 또한 정부군이나 이라크 내 이란 연계 민병대, 예멘 후티 반군,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등 역내 테러 단체가 무력 분쟁에 아동을 불법 징집하거나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언론인에 대한 폭력 및 위협, 부당한 체포 및 기소, 검열 등을

2024년 국가별 인권 보호 현황 보고서

미국 국무부 • 민주주의·인권·노동국(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포함한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종교의 자유 제한, 노동자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는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인권 침해를 자행한 공무원을 식별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1장 생명권

a. 초법적 살인

올해 정부 또는 정부 요원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했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 여기에는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나 소년범에 대한 처형, 적법 절차를 무시한 재판 후 집행된 사형 등이 포함됐다.

언론과 인권 단체들은 보안군의 행위로 구금 중 사망한 사건에 관련된 의혹들을 기록했다. 1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쿠르디스탄 인권네트워크(KHRN)는 케르만샤(Kermanshah)의 법 집행관들이 쿠르드계 이란인 파옴 압디(Payam Abdi)를 고문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했다. 쿠르디스탄 인권네트워크(KHRN)는 경찰이 압디를 체포한 후 며칠 만에 그의 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다고 보고했다.

2024년 국가별 인권 보호 현황 보고서

미국 국무부 • 민주주의·인권·노동국(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보고에 따르면 올해 살인 혐의로 처형된 사례가 다수였으나, 현행법은 국가 안보 위협, 고위 관료 모욕, *모하레베*(moharebeh, '신에 대항한 전쟁'), *피사드 필 아르즈*(fisad fil-arz, *배교·이단·강간·간통·상습 음주·이슬람 체제 전복 시도 등을 포함하는 '지상의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반체제 인사와 언론인을 '신에 대항한 전쟁'이라는 중대 범죄 혐의로 수시로 기소하고, 이들이 이슬람의 교리에 반하거나 이를 수호하는 국가에 맞서 투쟁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경미하거나 비폭력적인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도 사형을 선고했다. 압둘라흐만 보루만드 센터(Abdorrahman Boroumand Center)는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집행된 사형의 58%가 마약 관련 범죄였다고 보고했다. 4월 비정부기구(NGO)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이 가족 통보 없이 비밀리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2023년 전체 사형 집행 건수(853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발루치(Baluch)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의 약 5%에 불과하나, 마약 관련 처형의 29%를 차지했다.

이란와이어(IranWire)와 여러 언론 매체는 8월, 당국이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Kurdish)이자 소수 종교인 야르산(Yaresan) 공동체의 일원인 레자 라서이(Reza Rasaei)를 처형했다고 보도했다. 라서이는 체포 후 변호인 조력을 거부당했으며 구타, 전기 충격, 질식 고문, 성폭력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그는 여성, 생명, 자유 운동 관련 시위 도중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장교 살해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자백을 강요당했다.

처형된 인원 중 소수민족, 특히 발루치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압둘라흐만 보루만드 센터가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보고한 처형 인원 364명 중 27%가 소수민족이었으며, 약 10%가 발루치족이었다. 여러 비정부기구(NGO)는 올해 실제 처형 인원이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란 정부는 사형 집행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사형수의 이름, 날짜, 죄명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란 사법 제도가 해석·적용하는 이슬람법(Islamic law)은 법적 '성년' 연령(여아 9세, 남아 13세)부터 소년범 처형을 허용했다. 9월 비정부기구(NGO) 이란인권(Iran Human Rights)은 2010년 이후 이란이 소년범 71명을 처형했다고 보고했다.

인권 단체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개 처형 및 사형수의 목을 매달아 지면에서 들어 올리며 서서히 질식시키는 크레인 교수형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형 방식을 지속했다. ‘이란인권(Iran Human Rights)’은 9월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이 무장 강도 혐의로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보고했다. 간통죄에 대한 투석형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2002년 사법부가 투석형 유예를 지시한 이래 2010년 이후 실제 집행 사례는 없었다.

b. 강제적 인구 통제

강제 낙태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

해당 법은 당국이 인구 증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 정책에는 자발적 불임 시술 불법화 및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한 피임 용품 무상 배포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됐다. 또한 동 법은 대학 교과서 내 가족계획 관련 내용을 종교 신학교와 이슬람선전기구(Islamic Propaganda Organization, ISPO)가 협력해 마련한 ‘이슬람-이란 생활양식’에 관한 내용으로 대체할 것을 규정했다.

c.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집단학살 또는 분쟁 관련 학대 행위 증거

유엔이란독립국제진상조사단(UN's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Iran)은 3월 보고서에서 ‘여성, 생명, 자유’ 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행위 상당수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유엔이란인권특별보고관(UN'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Iran)은 7월 보고서를 통해

1980년대 이란 정부의 행위를 반인도 범죄 및 집단학살로 규정했으며, 특히 바하이교(Baha'i Faith) 신도 등 소수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학살이 자행됐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반인도 범죄나 집단학살 발생 여부를 확정 짓지 않았다.

제2장 자유권

a. 언론의 자유

헌법은 '이슬람 기본 원칙이나 대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인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하위 법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반하는 선전에 관여하거나 반대 단체를 지지할 경우, 3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2016년 당시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대통령이 서명한 비구속적 '시민권리헌장(Charter on Citizens' Rights)'은 모든 시민이 통신 수단을 불문하고 견해와 정보를 탐색, 수집, 게시, 전달할 권리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인정했으나, 연말까지 해당 헌장은 이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국가 언론의 상당 부분을 통제했다. 비정부기구(NGO) 국경없는기자회 (Reporters Without Borders)에 따르면,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나 「1986년 언론법(1986 press law)」은 당국이 '이슬람 공화국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성직자와 최고지도자를 모욕'하는 언론인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은 반국가 범죄나 국가 안보 저해 범죄를 선동하거나, 이슬람을 모독한 혐의를 받는 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성모독은 형사 처벌 대상이었다. 정부는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당국은 정부를 직접 비판하거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자, 혹은 정부의 도덕 규범 집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를 위협하고 기소하는 수단으로 법을 악용했다.

당국은 개인이 국가 통치 체제, 최고지도자, 국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보안군과 사법부는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사람뿐 아니라 대통령, 최고지도자, 내각, 의회를 공개 비판한 이들도 처벌했다.

정부는 시민의 모임, 이동, 통신을 감시했으며, 당국이 도덕 규범 위반으로 간주하는 사상이나 이미지를 표현할 경우 체포나 처벌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2024년 국가별 인권 보호 현황 보고서

미국 국무부 • 민주주의·인권·노동국(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비정부기구(NGO)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와 여러 인권 단체에 따르면, 2월 보안군은 경제신문사 *파르더예-에그테서드*(Farda-e-Eghtesad)의 편집국을 급습해 며칠간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후 알리 타스니미(Ali Tasnimi) 부편집장을 포함한 다수의 언론인이 체포되었다가 석방됐다. 경찰은 편집국 급습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의 후원을 받는 매체인 미전(Mizan)은 이번 급습과 체포가 "취재 및 언론 활동과 무관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 단체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테헤란 법원은 정치범 샤흐리여르 바여트(Shahriar Bayat)에게 '선지자 모욕' 혐의로 공개 교수형을 선고했다. 인권 단체 헝가우(Hengaw)는 바여트가 당초 2022년 '여성, 생명, 자유' 시위를 지지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또한 헝가우는 바여트가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관들이 다수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이미지를 바여트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물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신체적 공격, 구금, 압력

정부와 그 대리인은 인터넷 매체 종사자를 포함해 출판인, 편집인, 언론인이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까지 괴롭힘, 구금, 학대, 기소를 자행했다.

인권운동가 통신(HRANA), *이란와이어*(IranWire), *이란 인터내셔널*(Iran

International)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법원은 언론인 사바 아자르페이크(Saba Azarpeik)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징역 2년형과 소셜 미디어 활동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그가 정부 관료의 재정 비리를 보도한 데 대해 당사자들이 고소한 데 따른 판결이었다.

비정부기구(NGO)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수호(Defending Free Flow of Information)의 4월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1월부터 3월까지 최소 91명의 언론인을 기소했으며, 이 중 24명에게 도합 14년 7개월의 징역형과 총 1,50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언론인에게 적용된 가장 일반적인 혐의는 '여론을 교란하기 위한 허위 사실 유포'였다.

정부, 군, 정보기관, 경찰, 범죄 조직, 무장 극단주의자 또는 반군 단체의 검열

정부의 언론감독위원회(Press Supervisory Board)는 언론사 면허 발급을 포함해 보도 내용과 출판 전반을 규제했다. 위원회는 정부 비판 기사나 정치적 이유로 수감된 인물에 대한 보도를 이유로, 언론 면허를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하기도 했다.

문화이슬람지도부(Ministry of Culture and Islamic Guidance)는 외국 인쇄물을 포함한 모든 잠재적 출판물을 국내 발행 전 심의하여, 출판 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본문 삭제 및 수정을 요구했다. 독립 인쇄 매체가 존재했으나 정부는 그 운영을

엄격히 제한했다. 올해 정부는 공직자를 비판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출판물을 금지, 차단, 폐쇄하거나 검열했다. '테헤란 전자상거래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웹사이트 상당수가 당국의 필터링이나 차단으로 인해 접근 불가능했다. 주요 국제 언론사, 정치적 반대파,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 인권 단체 등의 웹사이트 상당수 역시 접근이 차단된 상태였다.

정부는 영화, 음악, 연극, 미술 전시를 통제하며 이슬람 가치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검열했다. 비정부기구(NGO) 이란인권기록센터(IHRDC)에 따르면, 모든 영화의 내용은 제작 전과 공개 상영 전, 두 차례에 걸쳐 성직자, 전직 감독, 전직 국회의원, 학자 등 9인으로 구성된 문화이슬람지도부 산하 영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사전에 적절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상영이 자의적으로 금지될 수 있었다. 정부는 세속주의를 조장하거나 여성 권리, 비윤리적 행동, 약물 남용, 폭력, 음주 등 비이슬람적 사상을 담고 있다고 간주되는 영화를 검열하거나 금지했다.

노래 가사, 음악, 앨범 재킷이 국가의 도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화이슬람지도부의 승인이 필수적이었으나, 다수의 언더그라운드 음악가는 허가 없이 앨범을 발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월 에스파한(Esfahan) 법원은 래퍼 투머즈 설레히(Toomaj Salehi)에게 ‘지상의 부패(spreading corruption on earth)’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설레히는 2022년 정부를 겨냥하여 ‘엄청난 실패의 해’라고 비판하는 가사를 발표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 시위 지지 영상을 공유한 후 처음 체포됐다. 그는 2023년 11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구금 중 고문 피해를 폭로하는 영상을 올린 뒤 재수감됐다. 6월 대법원에서 그의 사형 선고가 파기환송됐고, 8월 혐의 기각 후 12월 석방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7월 대선 보이콧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채널 2개 및 인스타그램 계정 500개와 관련해 100명을 소환 조사했다. 사법부는 또한 선거 보도와 관련해 언론매체 허쉬예 뉴스(Hashiye News)와 범더데-노(Bamdade-No)를 ‘허위 뉴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민영 방송은 허가 취득이 매우 어려워 엄격히 제한됐다. 정부는 국영 기관인 이란이슬람공화국방송(IRIB)을 통해 모든 TV 및 라디오 방송 시설을 사실상 독점 운영했다.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지역 주민들의 주요 뉴스 공급원인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치적·사회종교적 이념을 반영했다.

2024년 국가별 인권 보호 현황 보고서

미국 국무부 • 민주주의·인권·노동국(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정부는 최소 2003년부터 위성 방송 전파를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 위성 안테나는 불법임에도 널리 사용됐다. 위성 안테나를 유통, 사용, 수리하는 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문화이슬람지도부는 외국 언론사의 국내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통제했다. 외신기자 비자 발급 전 상세 이동 계획과 취재 예정 기사의 주제 제출을 요구했으며, 국내 이동을 제한하고 현지 ‘감시원’과 동행하도록 강제했다.

정부는 정부 조치에 비판적이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견해 및 발표 내용과 상충하는 출판물을 검열했다. 이란인권기록센터(IHRDC)에 따르면, 공식 이란국영통신(Islamic Republic News Agency, IRNA)이 주요 보도 주제와 유형을 결정해 각 언론사에 직접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검열 대상으로 특정한 정보 범주에는 여성 인권, 소수자 상황, 정부 부패 보도, 구금자 학대 관련 언급 등이 포함됐다. 당국은 또한 국내외 언론사의 시위 관련 보도를 금지했다.

정부 당국자는 체포와 구금을 당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언론인에게 자기 검열을 강요했다. 공직자들은 신문사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제기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언론감독위원회는 이를 언론재판소에 회부해 폐간, 정간, 벌금 부과 등 추가 조치를 취하게 했다. 사법부와 타 정부 기관이 과거 수감 이력이 있는 언론인을 노골적으로 검열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2024년 국가별 인권 보호 현황 보고서

미국 국무부 • 민주주의·인권·노동국(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b. 노동자 권리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법률은 노동자의 독립 노조 결성 및 가입, 단체교섭 참여, 합법적 파업 실시를 허용했으나, 반노조 차별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법률은 노동자가 모든 사업장에서 이슬람 노동위원회(Islamic labor council)나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이들 단체의 권리와 책임은 국제 노동조합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결사, 단체교섭, 파업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명시적 금지 대상은 아니었으나, 독립 노조의 시민사회단체 등록은 통상적으로 거부됐다.

법률은 단체협약 체결, 단체교섭 조직, 파업 실시를 위해 사전 인가를 요구했다. 실제로는 내무부가 파업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아 모든 파업이 불법으로 간주됐다. 민간 부문 근로자는 직장 내 '평화적' 활동만 가능했다. 동 법은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했다. 특히 노조 활동을 이유로 개인을 체포·구금해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방해하고, 단체교섭권 또한 제약했다. 법률은 반노조 차별을 금지하지 않았으며,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을 의무화하지도 않았다.

결사의 자유 및 파업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시민권 침해 관련 여타 법률 위반 시보다 경미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종종 파업과 노동 시위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시위와 파업 단속 과정에서 노조 지도자, 노동권 활동가, 언론인을 탄압했다. 비정부기구(NGO)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사, 석유 산업, 버스 운전자 노조 등 여러 노조원이 평화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투옥되거나 구금됐다. 독립 노조원들은 자의적 체포와 고문을 당했으며, 유죄 판결 시 장기 징역형에 처해졌다.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법원은 2023년 12월 체포된 노동 활동가 샤리페 모함메디(Sharifeh Mohammadi)에게 '국가에 대한 무장 반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체포 사실은 7월 4일 모함메디의 남편에게 통보되었다.

이란인권센터(CHRI)에 따르면, 노동자 대표와 경영진 대표로 구성된 노동평의회는 사실상 경영진이 운영하는 어용노조로서, 독립 노조를 유지하려는 노동자들의 노력을 약화시켰다. 그럼에도 노동 평의회는 때때로 정리해고나 파면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비시민권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조직화를 시도하거나 파업을 벌일 때마다 보안군은 위협, 자의적 체포, 폭력으로 대응했다. 파업과 노동자 시위는 연중 전국적으로 발생했으며, 종종 경찰의 강경 진압을 촉발했다.

자마네 미디어(Zamaneh Media)에 따르면, 보안군은 5월 1일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수십 명의 노조 활동가와 노동 단체 회원을 체포했다. 에빈 교도소(Evin Prison) 수감자 12명은 노동절 행사에 관여할 경우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보안 당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에 관한 공동 서한을 발표했다.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보안군은 5월 2일 '교사의 날'을 맞아 여러 도시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공격하고 체포했다.

강제 노동

미국 국무부 연례 인신매매보고서를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참조한다.

허용 가능한 근로 조건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법규

법률은 전 산업 분야에 국가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란 인터내셔널(Iran International)'의 1월 보고서에 따르면, 테헤란 거주민의 빈곤선은 월 약 3억 리얄(미화 600달러)인 반면, 월 최저임금은 1억 1,500만 리얄(미화 230달러)에 불과했다. 3월 정부는 최저임금 35% 인상을 발표했다. 노동계 대표들은 공식 통계상 연간 물가상승률이 42.5%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어, 인상 폭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노동 단체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조차 테헤란에서 한 가구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은 주 1회 휴무일을 포함한 최대 주 6일 44시간 근무, 최소 12일의 유급 연차 휴가 및 기타 유급 공휴일을 보장한다. 근로자는 규정된 총 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률은 초과 근무 시 통상 시급보다 높은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초과 근무 강요를 금지한다. 단, 동 법은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비시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주들은 이주 노동자, 특히 아프가니스탄 출신 근로자를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 임금 체불, 강제 초과 근무 등 부당한 근로 조건에 처하게 했다.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은 즉결 강제 추방에 취약한 상태였다.

2024년 국가별 인권 보호 현황 보고서

미국 국무부 • 민주주의·인권·노동국(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근로자가 임시직 계약 형태로 고용되어 정규직(비계약직) 근로자가 누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복리후생이나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사용자의 임의 해고 위험에 노출됐다. 법률상 합법적 거주 외국인의 고용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설정됐으며, 연장이 가능했다.

저임금, 임금 체불, 계약 관행에 따른 고용 불안정은 연중 지속된 파업과 시위의 원인이 됐으며, 이는 특히 임시 계약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빈번했다.

한 인권 단체에 따르면, 강제 초과 근무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간호사들에게 이를 강요하여 우울증, 자살, 돌연사 사례가 증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안군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항의하는 간호사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다.

산업안전보건

근로 감독 및 관련 법 집행 활동에 관한 정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법률은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 법률은 사전 통보 없이 주·야간 감독을 실시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가족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는 지역 검사의 서면 허가가 요구된다. 감독관은 노동부에 위반 사항을 보고하고 위반 기업에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 없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스스로 대피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노동 단체들은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매년 수백 명의 근로자가 사망한다고 보고했다. 산업 재해는 건설 부문에서 가장 빈번했으며, 중공업, 광업, 서비스업, 소규모 작업장, 공공 서비스업, 농업, 축산업이 그 뒤를 이었다.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 집행

산업안전보건, 임금,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이 사기나 과실 등 유사 범죄 처벌과 상응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초과근무, 산업안전보건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고, 위반자를 처벌했다는 보고도 없었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식별할 책임은 노동부가 지정한 작업장 내 '기술보호 및 산업보건위원회'에 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규정 준수를 강제하기에 불충분했다.

2020년 이란 국세청은 비공식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7.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비공식 부문에서도 노동법을 시행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비정부기구(NGO)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했다.

c. 실종 및 납치

실종

정부 당국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강제 실종 사례가 수없이 보고되었다. 사복 경찰들이 변호사, 언론인, 활동가들을 예고 없이 체포했고, 정부 관계자들은 그들의 구금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는 이러한 행위의 예방, 조사, 처벌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치활동가 에브라힘 바바이(Ebrahim Babaei)는 2021년부터 강제 실종 상태다. 언론 보도와 비정부기구(NGO)들에 따르면, 2022년 가을 '도덕 경찰(morality police)'의 구금 중 마흐사 지나 아미니(Mahsa Zhina Amini)가 사망한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에서 여러 명이 실종되었다. 비정부기구(NGO)인 유나이티드 포 이란(United for Iran)에 따르면, 이만 발라드베이지(Iman Valadbeigi)와 레자 아바시(Reza Abbasi)는 2023년 실종된 후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혐의 없는 장기 구금

헌법은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부는 대체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구금자는 법원에 구금의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자의적 구금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는 없었다.

정부는 이동과 통신을 제한하기 위해 불법적인 가택연금을 이용했다. 2011년 가택연금 조치된 전 대선 후보 메흐디 카루비(Mehdi Karroubi)와 미르 호세인 무사비(Mir Hossein Mousavi), 그리고 무사비의 아내 자흐라 라흐나바르드(Zahra Rahnavard)는 연말까지 정식 기소 없이 가택연금 상태에 머물렀다.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대통령이 카루비의 석방을 협상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그는 연말까지 여전히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군은 이들의 방문객 접촉과 정보 접근을 차단했다.

당국은 반정부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흔히 자의적 체포를 자행했다. 사복 경찰관들은 영장이나 적법 절차 보장 없이 예고 없이 주거지나 사무실을 급습해 인원을 체포하고 사문서, 여권, 컴퓨터, 전자 매체, 기타 개인 소지품을 압수했다.

이란인권센터(CHRI)에 따르면, 7월 히잡 강제 착용 반대자인 세피데 라시누(Sepideh Rashnu)는 2022년 대중버스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란인권센터(CHRI)는 라시누에게 적용된 혐의가 조작된 국가안보 위반 혐의라고 보고했다.

국제 언론과 인권 단체들은 복수 국적자들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혐의로 자의적이고 장기적인 구금을 겪고 있다고 기록했다. 복수 국적자들은 여타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롯해 다양한 인권을 침해당했다.

2024년 국가별 인권 보호 현황 보고서

미국 국무부 • 민주주의·인권·노동국(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여기에는 원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신속히 받을 권리 박탈,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약식 재판, 시의적절한 의료 처치 거부 등이 포함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024년 7월 스웨덴계 이란인 학자 아흐마드레자 잘랄리(Ahmadreza Djalali)가 사형 선고를 뒤집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했으나, 결국 처형될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보고했다. 잘랄리는 2016년 테헤란 대학교(University of Tehran) 강연차 입국했다가 간첩 혐의로 체포·기소됐으나, 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재판을 극도로 불공정했다고 규정했다.

미결구금은 특히 국가 안보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자의적으로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당하고 자의적인 미결구금 사례는 연중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상세히 기록됐다.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판사는 재량으로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고, 미결구금은 수개월간 지속되기도 했다. 5월 이란와이어(IranWire)는 에빈 교도소에 수감된 바리셰 모러디(Varisheh Moradi)와 파흐크산 아지지(Pahkshan Azizi) 두 여성이 미결 구금에 항의해 단식 투쟁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2023년 8월 처음 체포된 모러디는 '무장 반란' 혐의로, 아지지는 '반정권 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됐다. 아지지는 8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d. 종교의 자유 침해

2024년 국가별 인권 보호 현황 보고서

미국 국무부 • 민주주의·인권·노동국(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미국 국무부 연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https://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 참조한다.

e. 인신매매

미국 국무부 연례 인신매매보고서를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참조한다.

제3장 개인의 안전

a.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헌법은 '자백 유도나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고문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신체적·정신적 고문은 여전히 만연했다. 이러한 행위는 특히 시위 참가자 등 미결수 구금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비정부기구(NGO)와 국제 언론은 보안군과 교도소 직원들이 1년 내내 구금자와 수감자들을 고문, 구타, 강간, 학대했다고 보도했다.

교도소에서 흔히 보고된 고문과 학대 방법에는 처형, 강간 및 성폭행 위협, 수감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강간 위협, 강제적인 질 검사 및 항문 검사, 수면 박탈, 물고문, 매달기, 화학물질 강제 주입, 의료 치료 거부, 전기 충격(생식기 부위 전기 충격 포함), 화상 유발, 압박 자세 강요, 심각하고 반복적인 구타 등이 있었다.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당국은 사형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고의적으로 속여 석방이 임박했다고 믿게 한 후 사형을 집행했다.

법원은 태형과 같은 신체형을 부과했다. 실명형, 투석형, 신체 절단형 등은 합법적 처벌이었다. 최소 148건의 범죄가 태형 대상이었고, 신체 절단형은 20건의 범죄에 적용될 수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월, 쿠르드계 이란인 여성 로여 헤쉬마티(Roya Heshmati)가 페이스북에 히잡 없이 찍은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월 3일 74대의 태형 처벌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헤쉬마티는 교도관들이 자신의 어깨, 등, 엉덩이, 다리를 태형으로 때렸고, 처벌 과정에서 여성 교도관이 강제로 자신의 머리에 스카프를 씌웠다고 진술했다.

인권 단체들은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 카라지의 라자이 교도소(Rajai Prison), 테헤란 광역 교도소(Greater Tehran Penitentiary), 가르착 교도소(Qarchak Prison), 아델 아바드 교도소(Adel Abad Prison), 바킬아바드 교도소(Vakilabad Prison), 자헤단 교도소(Zahedan Prison), 에스파한 중앙 교도소(Esfahan Central Prison, 다스트게르드(Dastgerd)), 우르미예 교도소(Orumiyeh Prison) 등 여러 시설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잔인하고 장기적인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에빈 교도소(Evin Prison)의 209구역(Ward 209)과 2구역(Ward Two)이 주요 고문 장소로 자주 언급됐다. 또한 당국은 국가 교정 시스템 외에도 비공식 비밀 교도소와 구금 시설을 운영했으며,

2024년 국가별 인권 보호 현황 보고서

미국 국무부 • 민주주의·인권·노동국(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해당 시설에서도 학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 단체들은 정규군과 바시즈(Basij) 등 준군사 조직이 시위 참가자와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고문, 강제 실종, 폭력 등 수많은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대체로 시위 참가자, 비판적 언론인, 인권 활동가를 1979년 혁명을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간주했으며, 이에 따라 보안군이 국내법을 위반하며 학대를 자행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경찰이 아프가니스탄인, 특히 미등록 이주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했다고 보고했다. 일부 NGO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직장에서 근무 중이던 아프가니스탄 이주민을 검거해 수일 또는 수개월간 구금했으며, 구타하거나 현금 및 소지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8월 자유유럽방송(Radio Free Europe, RFE) 및 자유방송(Radio Liberty, RL)은 경찰이 15세 청각 장애 아프가니스탄 소년을 구금하는 과정에서 지면에 강하게 제압해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모든 보안군 조직 내에서 처벌 면제 관행이 만연했다. 검찰총장은 보안군의 학대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책임이 있으나, 조사 과정은 투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정부가 가해자를 징계했다는 보고는 거의 없었다.

*이란와이어(IranWire)*와 인권 비정부기구(NGO)들에 따르면, 교도관들은 수감 구역을 급습해 수감자를 구타하거나 다른 수감자 앞에서 알몸 수색을 실시했으며,

가족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언론과 NGO들은 구금 중 사망 사건과 당국이 통제하지 못한 수감자 간 폭력 사태를 보고했다.

보안군이 성폭력을 선동, 자행하거나 묵인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수감자와 구금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강간 및 강간 위협 사례가 다수 제기됐다. 7월 15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성명에 따르면, 수감된 여성 활동가 6명이 심문 과정에서 강간 및 살해 위협을 받고 고문을 당했다. 5월 법원은 포루그 사미니야(Forough Saminia), 시바 샤시아(Shiva Shahsiah), 네긴 레자이(Negin Rezaei), 아자데 차보시안(Azadeh Chavoshian), 마틴 야즈다니(Matin Yazdani), 젤베 자바헤리(Jelveh Javaheri) 등 여성들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비정부기구(NGO)인 펜 아메리카(PEN America)는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함마디(Narges Mohammadi)가 8월 교도소 마당에서 사형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보안군에게 가슴을 반복적으로 구타당해 기절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그는 적시에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 11월 다리의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모함마디는 12월 초 21일간의 일시 석방을 허가받았으나, 이는 의료진이 권고한 3개월의 자택 요양 기간에 턱없이 부족했다. 석방 전 1년여간 모함마디는 가족 접견이 차단된 상태였다. 연말 기준 모함마디는 형집행정지 상태에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당국은 비인도적 처우나 구금 중 의문사 의혹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24년 국가별 인권 보호 현황 보고서

미국 국무부 • 민주주의·인권·노동국(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FGM/C)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률은 없었다. 라디오 자마네(Radio Zamaneh)에 따르면, 여성 할례는 쿠르디스탄(Kurdistan), 호르모즈간(Hormozgan), 서아제르바이잔(West Azerbaijan), 케르만샤(Kermanshah) 주에서 가장 만연했다. 이퀄리티 나우(Equality Now)는 일부 공동체의 여성 할례 비율을 30~50%로 추정했다. 2016년 서아제르바이잔주 한 공동체에 속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학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활동가들은 민간 주도의 인식 개선 캠페인이 여성 할례 비율을 낮췄으나, 당국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 아동 보호

아동 노동

현행법은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으며, 당국은 기존의 금지 조항조차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 노동법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을 금지했다. 법률에 따라 16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은 정부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Organization)의 검진을 받고 의학적으로 근로에 적합하다고 판명될 경우 고용이 가능했다.

노동법은 주당 근무 시간을 44시간으로 제한했고,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은 성인보다 하루 30분 적게 일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아동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아울러 아동 노동법 위반자에 대해 당국이 책임을 물었다는 보고는 전무했다. 처벌 수위가 유사 범죄와 상응하는지,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인지에 관한 정보 역시 제한적이었다.

법률은 다음 사항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 노예로 부리는 행위 또는 아동 매매 및 아동 성매매 등 그와 유사한 행위 ▲채무 노역 및 농노제, ▲무력 분쟁 투입을 위한 아동 강제 징집 등 강제노동 ▲상업적 성행위·음란물 제작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이용·알선·제공, ▲마약 생산 및 밀매 등 불법 활동을 위한 아동 이용·알선·제공

아동권리 활동가들은 약 300만 명의 아동이 노동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아동 병사

미국 국무장관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이란 정부군, 경찰, 기타 보안군 및 정부 지원 무장 단체에서 소년병을 징집하거나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상세 내용은 미국 국무부 연례 인신매매보고서를(<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참조한다.

아동 결혼

법적 혼인 최소 연령은 여아 13세, 남아 15세였지만, 9세 여아도 법원과 부친의 허가 하에 혼인이 가능했다. 법률은 강제 결혼을 포함해 혼인 내 성관계를 원칙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했다. 5월, *이란와이어*는 아동 결혼 발생률이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권운동가 뉴스 통신(HRANA)에 따르면, 이란 통계청(Statistical Center of Iran)은 2023년에 15세 미만 여아 최소 2만 7,000명이 결혼했다고 보고했다. 정부 산하 등록기구(Registration Organization)에 따르면, 2022년 4월에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1,474명이었다. 인권 단체들은 아동 결혼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빈곤 가정이 딸을 결혼시킬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결혼 대출' 프로그램을 지목했다.

c. 난민 보호

이란 정부는 유엔 난민기구(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와 협력하여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했으나,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식별할 효과적인 심사 시스템은 미비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7월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 이란 정부가 아머예쉬(Amayesh) 제도를 통해 76만 1,000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실질적 난민 지위를 입증하는 카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란

정부는 *호비아트*(Hoviat)라는 유사한 제도를 통해 1만 2,000명의 이라크 난민도 인정했다. 2022년, 내무부는 현지에서는 '인구 집계'라고 불리는 조사를 진행하여 이란에 거주하는 260만 명의 미등록 아프가니스탄인을 등록했다. '인구 집계' 대상 아프가니스탄인들은 강제 송환 금지(refoulement) 증서(slips)를 수령했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들을 '난민 유사' 지위로 간주했다.

최초 망명 지위 부여

법률은 망명 또는 난민 지위 부여를 규정하며, 정부는 난민 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다. 1979년 헌법은 「1963년 난민 관련 규정(Regulation Relating to Refugees)」에 기초하여 정치적 망명을 요청할 권리를 명시했다. 동 규정은 망명 신청이 악의적이지 않고 취업 목적이 아닐 경우, 망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내무부 산하 '외국인·이민자사무국(BAFIA)'이 난민 신청자 등록, 심사 처리, 신분증 발급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었다. 연말 기준 국가이주기구(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NOM) 설립 법안이 계류 중이었으나, 실제 조사 기간 동안 동 기구가 해당 절차를 감독했다.

아머예쉬(Amayesh) 카드는 난민의 기본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조건부 취업 허가 발급을 용이하게 했으며, 체포 및 강제 추방을 막는 보호 수단으로 기능했다. NGO 소식통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한 동 카드는 갱신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높은 연간 갱신 수수료와 뇌물 요구 등으로 인해 난민들이 이를 유지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규 입국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정당한 보호 사유가 있음에도, 아머예쉬 지위 신청이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고됐다.

재정착

법률상 난민은 18세 이상으로 5년 이상 거주(계속 거주 또는 합산 시)하고, 병역 기피 사실이 없으며, 어느 국가에서든 비정치적 중범죄나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이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난민은 이란 국적자와의 결혼을 통해서도 귀화할 수 있으나, 남성 난민에게는 동 절차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8월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23년 정부와 협력해 난민 3,274명을 제3국으로 재정착시키고, 아프가니스탄 난민 460명의 자발적 귀환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d. 반유대주의 행위 및 반유대주의 선동

법률은 유대인을 종교적 소수자로 인정하고 의회 의석을 보장했다. 테헤란 유대인위원회(Tehran Jewish Committee)에 따르면, 이란 내 유대인 인구는 약 9,000명으로 추산된다.

유대인 공동체 구성원은 정부의 규제와 차별을 겪은 것으로 보고됐다. 최고지도자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발언을 일삼으며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왜곡했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Khamenei)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는 반유대주의적 공격과 비유가 반복적으로 게재됐다. 국영 언론은 '시온주의자'가 이란 관련 사안에서 서방 국가를 조종한다고 주장하거나, 국내 소요 사태의 배후로 '시온주의자'를 지목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정부는 여전히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의 주요 자금원이자 지원 세력이었다. 이들 단체는 유대인 살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등 반유대주의 이념을 표방했다.

비정부기구(NGO) 보고에 따르면, 역사·종교·사회 등 교과서에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수록됐다.

종교적 동기 여부와 무관한 이란 내 반유대주의 사건 및 유대인의 종교·신념의 자유 행사 실태에 관한 상세 정보는 미국 국무부 연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https://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 참조한다.

e. 초국가적 억압 사례

이란 정부는 타국 체류 인원을 이란으로 강제 송환하거나, 정치적 보복을 가할 목적으로 살해, 납치, 폭력 및 협박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영토 외 살인, 납치, 폭력 또는 폭력 위협

유럽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이란 언론인은 이란 정부가 사주한 폭력이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술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런던에서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영국 기반 방송사 이란 인터내셔널(Iran International) 소속 언론인 푸르여 제러아티(Pouria Zeraati)를 자택 인근에서 흉기로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란 인터내셔널(Iran International)은 자사 소속 언론인들이 2022년부터 이란 정부의 위협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일례로 스웨덴 거주 기자인 메흐란 압바시연(Mehran Abbasian)은 6월 스웨덴 경찰로부터 '심각한 위협'이 있음을 통보받은 후 안전가옥으로 피신했다. 압바시연은 이란 인터내셔널(Iran International)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가 범죄 조직을 사주해 자신과 동료들을 암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10월 당국은 독일계 이란인 반체제 인사 잠쉬드 셔르마흐드(Jamshid Sharmahd)를 처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자, 이란 측은 입장을 번복해 셔르마흐드가 사형 집행 전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국가별 인권 보호 현황 보고서

미국 국무부 • 민주주의·인권·노동국(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이란 당국은 2020년 두바이에서 셔르마흐드를 납치해 이란으로 강제 압송했다. 이란인권센터(CHRI)는 셔르마흐드가 처형 전까지 고문과 장기간의 독방 구금에 시달렸다고 보고했다.

위협, 괴롭힘, 감시, 또는 강압

비정부기구(NGO)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해외 체류 인사를 압박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괴롭힘, 협박, 감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정부는 해외 거주자의 이란 내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을 수시로 위협했다.

1월 '이란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이란 고위 당국자들이 망명한 이란 축구 선수 알리 카리미(Ali Karimi)를 대상으로 납치 및 살해 위협을 가했다.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카리미는 '여성, 생명, 자유'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이란 축구연맹 보안 책임자를 지낸 레자 나기푸르(Reza Naqipour) 대통령실 의전국장은 인스타그램에 "언젠가 당신(카리미)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나기푸르는 이라크에서 납치돼 이란으로 압송된 뒤 처형된 언론인 루홀라 잠(Ruhollah Zam)을 암시하는 '#RuhollahZam' 해시태그를 사용했다.

이동 통제 시도

정부는 반체제 인사로 간주되는 해외 거주 자국민에게 여권 갱신을 포함한 영사

서비스를 거부했다. 2월, '이란와이어'는 스페인과 체코 주재 이란 대사관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거나 외신에 근무하는 이란인들의 여권 갱신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타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인권 활동가들에 따르면, 이란은 정부에 적대적인 인물을 송환받기 위해 이라크 및 튀르키예 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르디스탄 인권네트워크(KHRN)는 9월, 이라크 쿠르디스탄애국연합(Iraqi Patriotic Union of Kurdistan) 산하 경찰 병력이 이란계 쿠르드인 망명 신청자 베흐저드 코스라비(Behzad Khosravi)를 이란 당국에 신병 인도했다고 보고했다. 코스라비의 가족은 이라크 쿠르디스탄 당국으로부터 이송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란 쿠르드민주당(KDPI)은 코스라비가 자당 소속임을 확인하며 이라크의 술라이마니아(Sulaymaniya) 당국이 그를 강제 송환했다고 주장했다.